

북한·북핵문제 美 정책적 의지 재확인

박대통령 귀국 ... 한미정상회담 결산

‘中 경사론’ 불식 ... 동북아 능동외교 토대 강화 박정희 대통령 이어 50년만에 나사 우주센터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3박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13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바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 등에 대한 의

견을 교환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오찬회담 이후 기자회견장까지, (또)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경내를 함께 거닐면서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정제된 가운데 북한·북핵 문제만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에 이어 미국과도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통일 외교의 속도도 높였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통일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여론 주도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주력했다. 또 지난 14일 제막 20년이 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전·현직 고위인사를 포함해 미국의 한국 관련된 인사들이 총출동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파트너이며, 한·미 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면서 동맹 강화 행보도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국방부(펜타곤) 방문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 2~4일 중국을 방문, 텐안먼(天安門) 성루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란히 올라 중국의 군사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했던 박 대통령은 미국 패권의 중심부인 펜타곤에서 한미 장병에게 “여러분이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박 대통령의 이런 동맹 강화 행보와 관련, 조 바이든 부통령 초청 관저 오찬,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 의장행사, 숙소인 블레이 하우스(영빈관)에 박 대통령 사진 비치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예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 만에 1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미 간 우주 협력 강화방안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재계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미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한미 양국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박정희기자 jkpark@연합뉴스

들불처럼 번지는 “국정화 반대”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국민대회 교과서 반대 청소년 거리행동 역사연구회 교과서 제작 불참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한국사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국정화 교과서 집필 과정에 불참하겠다는 사학계도 점차 늘고 있다.

전교조 등 46개 단체의 연대체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8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화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씨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으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어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인증샷 캠페인 등을 계속해서 펼치고 청소년을 주축으로 관련 소송인

단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북측광장에서 지난주에 이어 제2차 국정교과서 반대 행사를 열었다. 청소년 50여명(경찰추산)은 ‘역사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교복에 검은 타이와 흰 장갑을 착용하고서 국정화 철폐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 전문 연구자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는 단일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5일 전·현직 회장 및 운영위원이 참석한 비상회의에서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교과서 연구개발·집필·수정·검토 등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1988년 출범한 학회로 700명이 넘는 회원이 속해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근현대사 전공자 5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근현대사학회

가 교과서 집필 불참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42% 반대 42% 팽팽

한국갤럽 1003명 설문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3~15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 42%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각은 세대와 지지 정당에 따라 갈렸다.

고연령대와 새누리당 지지층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

고, 반대 의견은 저연령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사이에서 우세했다.

20대 응답자 가운데 66%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1%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11%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8%가 국정화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응답자의 65%는 반대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응답자의 50%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했다. 찬성은 41%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9%는 입장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전남창조혁신센터·GS리테일, 농업박람회 공동 상담부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GS리테일이 오는 11월 1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 공동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행사 기간 동안 상담부스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GS 리테일 유통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금융·마케팅·교육 지원 등 농수산 식품기업과 생산 농가를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상담도 실시한다.

그동안 GS 리테일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도내 6개 기업, 9개 우수 품목을 발굴해 GS 25와 GS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등 농가와 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앞장서왔다.

농수산 식품 농가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노하우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350억원에 달하는 투자 및 융자 펀드를 조성해 농수산 벤처가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부스를 찾는 기업과 농가들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GS 리테일의 각종 지원사업과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강의 보물’ 세빛섬 개장 첫돌

개장 1주년(지난 15일)을 맞은 서울의 복합 수상문화공간 세빛섬의 조명이 18일 밤, 한강 일대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세빛섬 운영사인 효성그룹은 “세빛섬은 평일 평균 4500여 명, 주말 1만여 명이 몰리면서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세빛섬은 ‘한강의 흥물’이란 오명을 떨치고 개장 1년 만에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효성 제공>

“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 준비는 자치권 침해”

광산구 등 26개 지자체,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광주시 광산구 등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곳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을 둔 지자체로, 광주 광산구 1곳을 포함한 서울(18

곳·경기(5곳)·인천(2곳) 등 26곳이다.

광산구 등 해당 지자체는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지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는 또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불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제3회 빛창공모전

시인이 되다

밝은광주안과가 제3회 시인이되다 빛창공모전 겨울편을 개최합니다. 빛창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안과 눈모양빌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인 여러분의 감성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담아주세요.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15. 10. 12(월) ~ 11. 5(목)
발 표 일 : 2015. 11. 9(월) 오후 2시 병원 홈페이지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자유주제

접수방법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시상내용 대 상(1편) : 문화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1편) : 문화상품권 20만원
우 수 상(2편) : 문화상품권 10만원
가 격(10편) : 문화상품권 3만원

문 의 밝은광주안과 기획실 (062-351-9938)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종-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